



원자력산업과 삼척의 발전



김대수
삼척시장



단국대 대학원 공학박사

(주)한국화학품 개발(연구)부장

(주)동우제약 공장장

삼척산업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산업대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삼척대 교무처장, 기획연구실장,

평생교육원장

삼척대학교 총장

삼척은 과거 석탄 및 시멘트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한 국내 최대의 에너지 자원 도시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왔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및 시멘트 산업 사양화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지역 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1970년대 후반 30만에 달하던 인구는 2006년 7만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지역 경제를 건인할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원자력산업이 대안이라는 확신이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0년 12월 16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자율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2012년 9월 14일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와 동막리 일대 3,176,292㎡(약961천평)를 '대진 원자력발전소 조성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원전 유치는 확정되었다.

원전 유치로 복합 에너지 거점 도시 토대 마련

삼척은 현재 약 10조원 규모의 LNG 생산 기지와 종합 발전 단지를 건설중에 있고, 이제 원자력발전소까지 유치하게 됨으로써 LNG, 복합화력, SNG, 원전 등 주요 에너지원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복합 에너지 거점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24조원 규모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 삼척시민이 해냈습니다. ~

■ 일 시 : 2011년 12월 23일 15시 ■ 장 소 : 삼척시청앞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외 68개 사회단체 일동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등 사회단체 대표들의 신규 원전부지 선정 환영 성명 (2011.12.23)

삼척시는 원전 유치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건설 기간 중에는 건설 인력에 지급되는 임금과 지역 업체의 직·간접적인 공사 참여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운영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협력 업체의 직원 및 가족, 사업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십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는 지역 지원 사업과 지방세수 증대를 통해 삼척시 전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출산이 그러하듯 모든 '창조적 시간'에는 극심한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원자력발전소 유치 또한 슬한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을 야기시켰고, 사고 수습이 지체되면서 원전 반대 여론도 점점 악화되었다. 급기야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에서는 삼척 원전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이 삼척시 발전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전문가 초빙 특강, 원자력 시설 견학,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었다.

급기야 일부 원전 반대 세력들이 주도하여 사상 초유의 주민 소환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시민들의 선택으로 무산되었다. 이것은 삼척 원전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삼척시민 모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참여해서 마침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삼척은 현재 약 10조원 규모의 LNG 생산 기지와 종합 발전 단지를 건설중에 있고, 이제 원자력발전소까지 유치하게 됨으로써 LNG, 복합화력, SNG, 원전 등 주요 에너지원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복합 에너지 거점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 사업자의 전폭적인 지원 기대

원전 유치가 확정되었고, 주민 소환 투표 무산으로 시민의 의사도 충분히 확인된 만큼 지역 내의 원전 찬반 논란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지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삼척 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원자력산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삼척은 원전으로 분열했고, 갈등도 있었지만, 원자력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 유일의 복합 에너지 거점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사업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삼척시민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원전을 유치한 삼척시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쉬움이 크다.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일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원자력 르네상스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 때, 우리나라만 원전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미루는 동안 반핵 단체들은 주민 소환 이후 주춤했던 활동을 재개하여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처한 에너지 여건과 산업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반복해서 재생산되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유보를 이유로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여 직원들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 외에도 기업이 지역에 베풀 수 있는 환원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원전과 지역이 윈-윈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 창출에 힘써주기 바란다.

원전 유치가 확정되었고, 주민 소환 투표 무산으로 시민의 의사도 충분히 확인된 만큼 지역 내의 원전 찬반 논란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지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다.

1970년에 인구 8만명에 불과했던 포항시는 현재 인구 52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했고, 1970년에 인구 27만명의 울산시는 현재 인구 120만명의 광역시로 발전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인구 30만의 삼척시는 현재 인구 7만에 불과한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안목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고 집중한 결과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삼척 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원자력산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삼척은 원전으로 분열했고, 갈등도 있었지만, 원자력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 유일의 복합 에너지 거점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사업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삼척시민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한다.